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 ① 성장이나, 분배냐
- ② 3% 성장 가능한가
- ③ 한국 경제의 뒷 가계부채
- ④ 구조조정 속 고용 위축 가속화
- ⑤ 소비 불황의 돌파구 마련될까
- ⑥ 무역 1조 달러 재도전
- ⑦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

목 차

■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2
3. 시사점	16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외 5명

Executive Summary

□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 개요

대선이 치러질 2017년은 경제 성장과 분배간의 정책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2%대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으로서는 내년도 국내 경제에는 경기 활성화를 가져올 기회 요인보다는 경기 부진을 지속시킬만한 리스크 요인이 더 많아 보인다. 이에 내년도 국내 경제에 이슈로 부상할 만한 7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리스크 요인 대응 방안 및 기회 요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이슈 제목	선정 배경
리 스 크 요 인	① 성장이나, 분배나	-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년에 미약한 경제 회복세 제고가 우선인가, 취약한 분배 개선이 우선인가라는 정책 논란 제기 예상
	② 3% 성장 가능한가	-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이고 단기 경기 부양 정책 시행 여건도 쉽지 않아 3% 성장률 달성 논란 예상
	③ 한국 경제의 뒷, 가계부채	- 증가세인 가계부채가 소비 및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불안의 원인 등 잠재적 리스크로 부각될 우려
	④ 구조조정 속 고용 위축 가속화	- 제조업 고용 악화, 청년 및 노년층 고용 부진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고용 대책 효력이 나타날지 주목
기 대 요 인	⑤ 소비 불황의 돌파구 마련될까	- 소득, 자산, 구조적 여건상 소비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 예산 증가 등 일부 긍정 요인 포착
	⑥ 무역 1조 달러 재도전	-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국제 유가의 완만한 상승세 등으로 수출입이 증가세로 반등하면서 무역 1조 달러 재달성 기대 확산
	⑦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	-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바닥 수준이었던 내수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기대

① (성장이나, 분배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의 고갈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선진국 대비 취약한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7%에서 2010~2015년

3.2%로 1.5%p가 하락하였다. 나아가 2026~2030년에는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조사대상국 28개국중 최하위일 정도로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선이 있는 2017년에는 상충관계에 있는 성장과 분배에 대해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3% 성장 가능한가) 2015년 중반 이후 경기 흐름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단기 경기 부양 여건도 만만치 않아 내년에도 3% 성장률 달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이후 둔화되던 우리나라 경기는 2015년 중반 이후 미약하지만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2% 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노동 부문은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도 지연되고 있어 신성장·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및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 등으로 향후 단기 경기 부양 정책 시행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한국 경제의 덩,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소비 및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 불안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시장 정상화로 가계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6년 6월 말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1,257.3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말 현재 145.6%로 2015년 9월 말 140.7%보다 4.9%p 상승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가계부채는 질적으로 구조개선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금리 상승시 부실위험가구 증가 및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에 따라 민간 소비 증가 제약 우려 등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④ (구조조정 속 고용 위축 가속화) 2017년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용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고용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신규취업자가 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2017년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신규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제조업 부문의 고용전망 경기실사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취업자가 느끼는 취업기회전망, 소비자동향지수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들어와서 청년

및 노년층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데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⑤ (소비 불황의 돌파구 마련될까)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소비가 2017년에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소득, 자산 그리고 구조적 여건을 살펴볼 때 민간소비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고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 예산 증가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여 장기 소비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⑥ (무역 1조 달러 재도전) 2017년 수출입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무역 1조 달러 재달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8월 전년동월대비 2.6%로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8월 수입 역시 0.1%로 23개월 만에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멈추면서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인 수출물가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 경기 회복세로 세계 교역도 완만한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어 수출 대외 환경은 2016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감소했던 수출입이 2017년에는 모두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역 1조 달러 재달성에 대한 기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⑦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대내외 불확실성이 2017년에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내수심리의 회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는 연초 중국 증시 급락,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 국제 유가 급락, 브렉시트 투표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국내 경기의 부진한 회복세가 맞물리며 국내 소비 및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투표 이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이 일부 해소되며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향후 경제 인식 및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심리지수는 최근 저점을 지나 소폭 개선되는 징후가 나타났으며, 기업들의 업황 전망 역시 최근 개선되는 등 내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내수 심리 회복이 실제 소비 및 투자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2017년에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의 과실이 분배로 돌아간다는 원칙 속에서 성장잠재력의 지나친 하락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향후 정치 시즌을 맞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심성 포퓰리즘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에서의 정치적 공약에 대한 교차 검증을 통해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인 3% 성장률 달성 논란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소득 계층별 부채 및 자산 규모 분포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 요인 관리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원금상환 유도, 서민금융제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금융 컨설팅 등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구조조정, 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경색을 완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조선·해운업 및 수출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단기적인 노동시장 경색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비 불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가계의 소득, 자산, 구조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일자리 창출→소득증대→가계소비→기업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2017년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에 진입하고 세계 교역 증가율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 확대의 전기 마련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신규시장 개척, FTA 활용 제고 노력과 더불어 기술 혁신 및 신제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부양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실제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세월호 및 메르스 사태와 같이 민간의 내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돌발 요인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있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

1. 개요

○ 2%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에 국내 경제에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가지 요인을 선정 및 정리

- 리스크 요인 : ①대선 관련 경제 정책 이슈(성장이나, 분배나), ②저성장 지속 (3% 성장 가능한가), ③가계부채 부문(한국 경제의 덩, 가계부채), ④고용 부문(구조조정 속 고용 위축 가속화) 등 4가지를 선정
- 기대 요인 : ⑤민간 소비 부문(소비 불황의 돌파구 마련될까), ⑥수출 부문(무역 1조 달러 재도전), ⑦경제 심리 부문(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 등 3가지를 선정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이슈 제목	선정 배경
리 스 크 요 인	① 성장이나, 분배나	-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년에 미약한 경제 회복세 제고가 우선인가, 취약한 분배 개선이 우선인가라는 정책 논란 제기 예상
	② 3% 성장 가능한가	- 경기 흐름은 미약하나 회복세를 보이지만,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이고 단기 경기 부양 정책 시행 여건도 쉽지 않아 3% 성장률 달성 논란 예상
	③ 한국 경제의 덩, 가계부채	- 증가세인 가계부채가 소비 및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불안의 원인으로 부각될 우려
	④ 구조조정 속 고용 위축 가속화	-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고용이 악화되고, 청년 및 노년층 고용 여건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고용 대책 효력이 나타날지 주목
기 대 요 인	⑤ 소비 불황의 돌파구 마련될까	- 소득, 자산, 구조적 여건상 소비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 예산 증가 등 일부 긍정 요인 포착
	⑥ 무역 1조 달러 재도전	-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국제 유가의 완만한 상승세 등으로 수출입이 증가세로 반등하면서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대 확산
	⑦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	-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바닥 수준이었던 내수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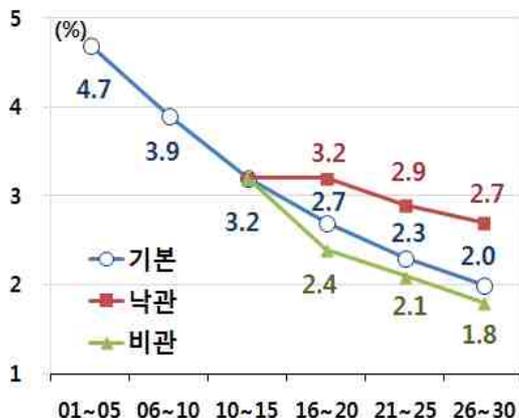
2.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① 성장이나, 분배나

○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의 고갈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선진국 대비 취약한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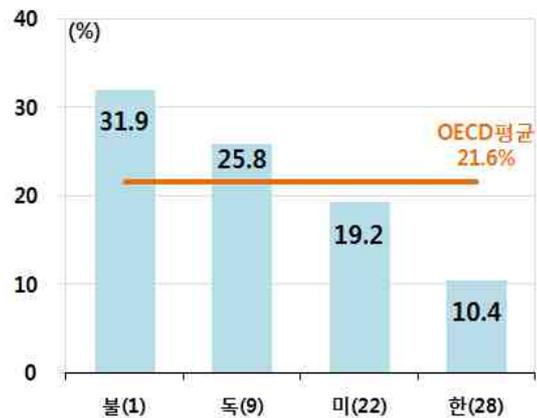
-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에 대한 고갈 우려 확산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7%에서 2010~2015년 3.2%로 1.5%p가 하락
 - 나아가 기본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6~2030년에는 2.0%,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1.8%로 더 성장감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
- 동시에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경제 내 자원 할당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조사대상국 28개국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21.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이에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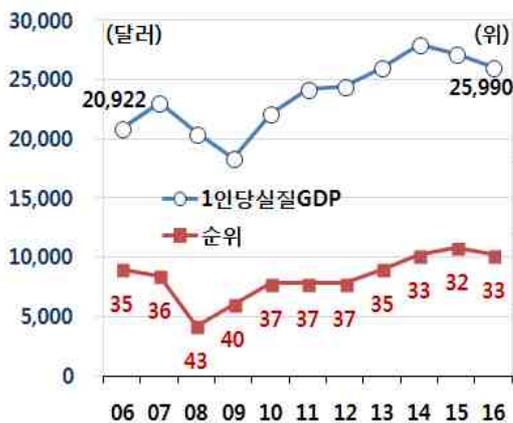
<주요국 공공사회지출/GDP 비율(2014)>



자료 : OECD(Public Social Expenditure).
주 : 괄호안은 28개국 중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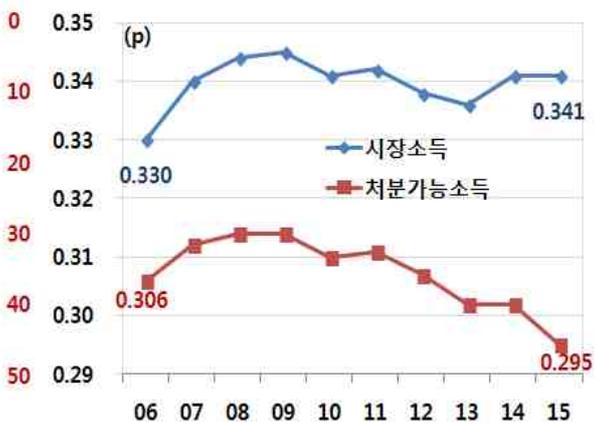
- 미시적인 지표에서도 국민의 소득수준이 크게 높아지지도 않았으며 소득 불평등도의 수준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음
 -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006년 2만 922달러에서 2016년 2만 5,990달러로 기간중 연평균 2.2% 증가에 불과, 이에 따라 국민의 소득 수준에 대한 세계 순위는 같은 기간 35위에서 33위로 거의 정체되는 모습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¹⁾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 0.306에서 2015년 0.295로 소폭 하락(개선),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 0.330에서 0.341로 오히려 상승(악화)
- 대선이 있는 2017년에는 미약한 성장력과 취약한 분배라는 현실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2017년은 대선이 있는 정치적 기간이기 때문에 정당, 언론, 경제 관련 부처,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상충관계(trade-off)를 가지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
 - 다만, 2017년은 대선이 있는 정치적 기간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분배 쪽에 치우치는 주장들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한국의 1인당 GDP 및 세계순위>



자료 : IMF.

<지니계수 추이>



자료 : 통계청.

1)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

② 3% 성장 가능한가

○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도 쉽지 않아 내년에도 3% 성장률 달성에 대한 논란 지속 예상

- 2010년 이후 둔화되던 우리나라 경기는 2015년 초중반 이후 미약하지만 회복세가 감지됨

- 최근 한국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W자형(전년동기대비 성장률 기준) 경기 흐름을 보임
- 회복세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이 3% 이하²⁾로 하락 예상

- 국민계정상 (민간부문)고정투자/GDP 비중은 1990년 32%에서 2015년 25%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 축적이 저하되고 자본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역시 하락
- 저출산·고령화 지속으로 생산에 기여를 하는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노동 부문은 성장률을 오히려 하락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6년 1월).

2)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1월,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 향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필요하지만, 규제 완화 지연으로 신성장·신산업에 대한 투자 전망은 불확실
 - 대표적인 국별 규제지수³⁾인 'OECD상품시장규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강한 편으로 나타났음
 - 동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비교적 완화되었지만, 전체 회원국 중 순위는 하락하여 다른 회원국의 규제 완화 노력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은 먼 수준임을 드러냄
-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도 마땅치 않아, 경기 흐름이 더 꺾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도 어려운 상황
 -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증가하는 국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은 다소 낮아 보임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의 단기 제고에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SOC투자는 2016~2020년 연평균 6% 감소할 전망⁴⁾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면서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 부양책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

<한국의 'OECD상품시장규제지수' 순위>

		2003년	2008년	2013년
규제지수	한국	1.95	1.94	1.88
	OECD 평균	1.78	1.59	1.73
한국 규제순위		22위/ 30개국중	29위/ 34개국중	30위/ 33개국중

자료 : OECD.

주 : 규제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약한 규제수준임을 의미함.

<기준금리 및 국가채무/GDP 비율>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주 : 2016년 및 2017년 국가채무/GDP 비율은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에 근거한 전망 자료.

3) 국별 규제지수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규제의 대응 변수(창업 시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한 측정이나 피규제자 등의 주관적 규제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각 나라의 규제 정도를 지수화하여 비교 가능하게 만든 자료(용어 설명 : 한국은행, 2008년 9월,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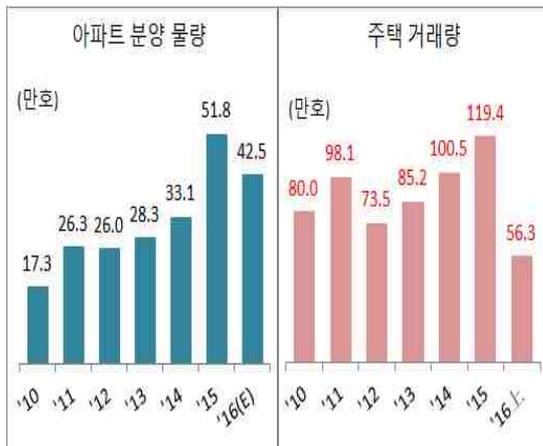
4) 기획재정부, 2016년 9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③ 한국 경제의 덩, 가계부채

○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 주택과잉공급 문제,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주택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5년에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도 과거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주택 거래량도 2015년을 정점을 기록, 2016년 상반기 주택거래는 46.8만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3.4%로 감소했지만, 2012~2014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주택시장 정상화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 유지 등 복합적 요인으로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 상승
 - 2016년 6월 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1,257.3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1%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 지속
 -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말 현재 145.6%로 2015년 9월 말 140.7%보다 4.9%p 상승

<아파트 분양과 주택 거래량>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가계 부채 규모>



자료 : 한국은행(201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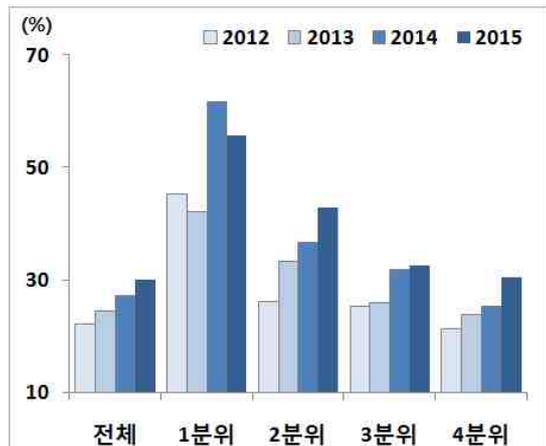
- 최근 부채관리 방안으로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 등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정부의 가계 부채 질적 개선 노력 지속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 금리 비중과 분할상환비중의 지속적으로 증가
 - 또한 분할 상환 비중이 보험업과 상호금융에서도 각각 2016년 3월 말 34.7%, 5.1%에서 2016년 6월 말 36.4%, 6.0%로 증가하는 등 비은행권에서도 구조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음
- 한편,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소비 및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 불안 초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저금리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
 - 금리 상승 시 부실위험가구 증가 및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제약 우려
 - 금리가 100bp 상승 시 한계가구와 부실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비중은 각각 29.1%, 20.1%에서 31.8%, 22.3%로 2.7%p, 2.2%p 상승할 것으로 나타남⁵⁾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대출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주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 대비 비중.

< 소득분위별 원리금 상환액/가처분소득 비중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부채 가구 기준.

5)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이며, 부실위험가구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용어설명 : 한국은행, 201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④ 구조조정 속 고용 위축 가속화

○ 2017년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용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고용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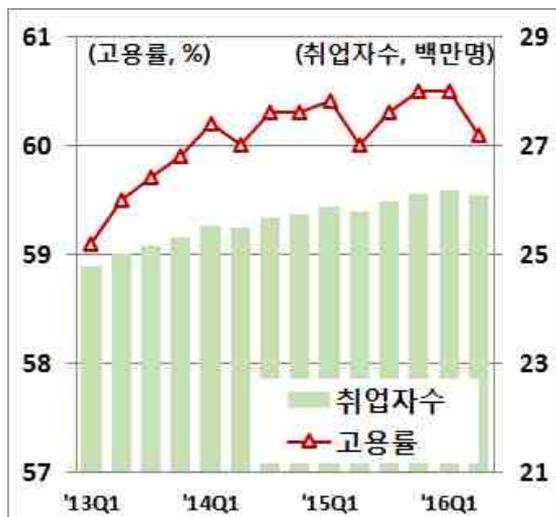
- 최근 한국 경제는 신규취업자가 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 우리나라 계절조정 고용률은 2013년 1/4분기 59.1%에서 2016년 2/4분기 60.1%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⁶⁾
-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2013년 1/4분기 2,476만 명에서 2016년 2/4분기 2,608만 명으로 증가함

- 그러나 2017년 생산이 늘어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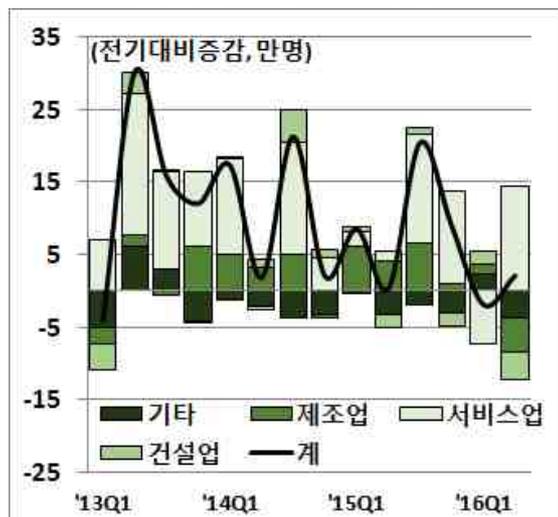
- 수출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2016년 2/4분기 제조업의 취업자수가 감소로 전환함
- 향후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신규 투자도 부진할 경우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에도 파급될 가능성도 존재함

<고용률 및 취업자수>



자료 : 통계청.
주 : 계절조정시계열.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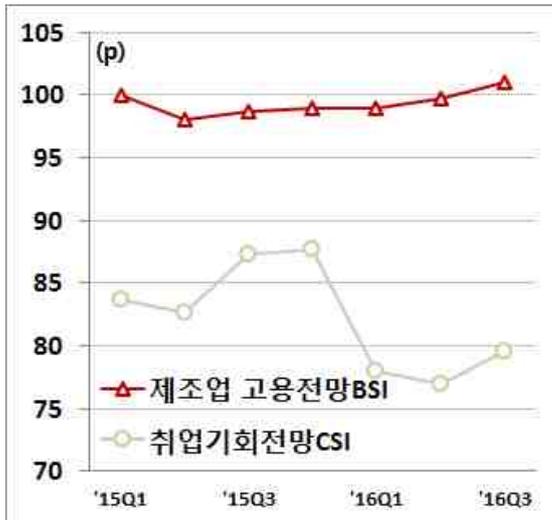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 계절조정 시계열의 전기대비 증감.

6) 단, 같은 기간 구직활동의 증가로 계절조정 실업률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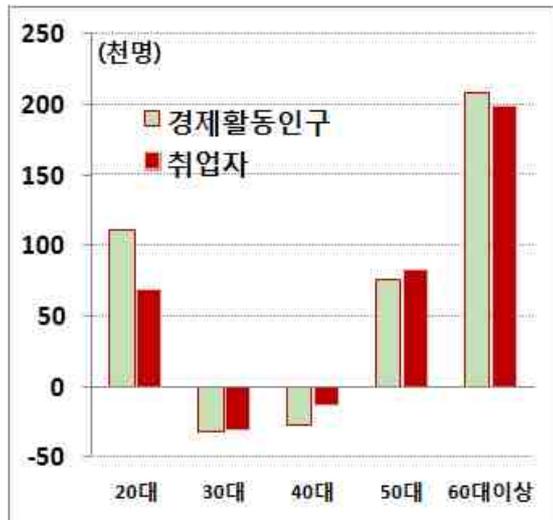
- 제조업 부문의 인력사정전망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취업자가 느끼는 취업기회전망도 악화
 - 제조업 인력사정 기업실사지수(BSI)는 2016년 3/4분기 101p로 2015년 2/4분기 98p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악화됨
 - 한편 소비자동향지수(CSI)의 취업기회전망은 2016년 1/4분기 이후 크게 악화되어 2016년 3/4분기 80p에 머무르고 있음
- 또한 2016년 청년 및 노년층 고용이 특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질 전망
 - 2016년 1~8월 30, 40, 50대의 연령층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증감을 비교할 때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방향임
 -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취업자 증가보다 커서 경제활동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고용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의 고용 대책에 따라 고용 위축이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

< 제조업 인력사정 BSI 및 취업기회전망 CSI >



자료 : 통계청.
 주 1) 분기별 월평균 기준.
 2) 2016년 3분기는 7, 8월 기준.
 3) BSI는 매출가중전망BSI.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증감>



자료 : 통계청.
 주 : 2016년 1~8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감.

7) 인력사정 BSI는 「과잉」 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 응답업체 구성비(%) + 100 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⑤ 소비 불황의 돌파구 마련될까

○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소비가 2017년에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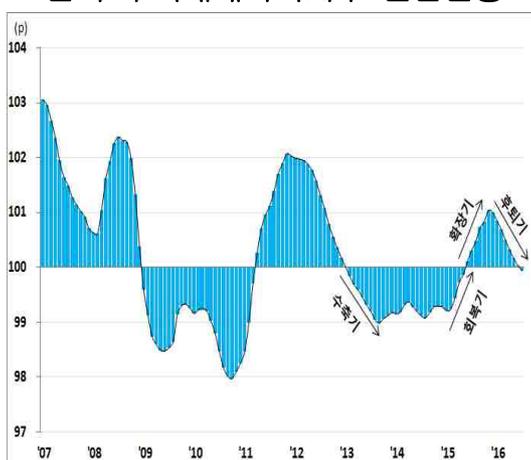
- 민간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평균소비성향은 통계작성 이래 최저
 - 민간소비는 연간기준으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16년 2/4분기 통계작성 이래 최저인 71.5%까지 하락
- 가계의 실질구매력(실질임금, 취업자 수 등) 증가는 제약
 -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 되는 기업구조조정이 경기후행 지표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저물가, 저유가 현상이 내년에 다소 완화되며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제약
-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가계 소비를 위축 시킬 것으로 예상
 - 최근 이례적으로 늘어난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비교하여 가계의 부동산 수요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 부동산 시장은 수축국면(후퇴기 →수축기)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⁸⁾

<가계 소득 증가율 및 신규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주 :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이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순환변동>



자료 : 국민은행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이 자체추정.

8)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8월,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 평균소비성향 하락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 인구구조 변화, 주거비 등이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
 - 가계부채의 급증세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2016년 1/4분기 기준 145.6% 수준까지 늘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
 -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노후대비 수요가 늘어나며 가계가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
 - 전세 가격 수준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

- 다만 최근 민간소비가 최근 경제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심리 개선 흐름, 정부의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은 소비 불황의 돌파구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최저임금 상승⁹⁾, 일자리 예산 증가¹⁰⁾ 등은 소비에 긍정적 요인
 - 2017년에는 올해보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대규모 세일행사가 정례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정착된다면 소비 진작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고령화율 및 인구성장률 전망>



자료 : 통계청.
 주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총 인구).

<민간소비 및 GDP 증가율 격차>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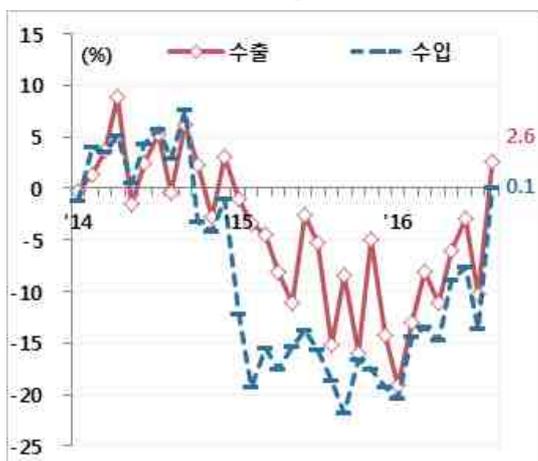
9)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 보다 7.3% 인상된 6,470원임.
 10) 2017년도 일자리 예산은 17조 5,22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

⑥ 무역 1조 달러 재도전

○ 2017년 수출입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무역 1조 달러 재달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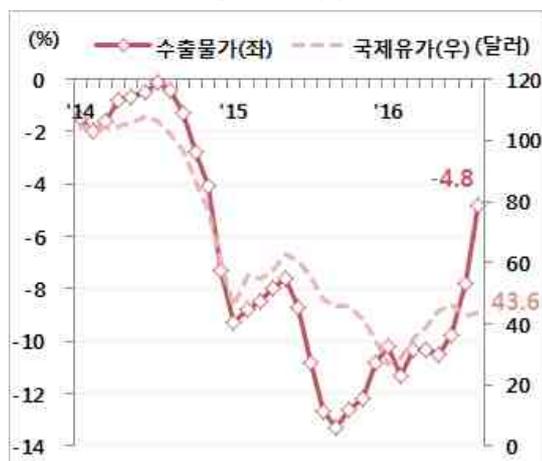
- 수출 증가율이 2016년 8월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 수출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8월 전년동월대비 2.6%로 20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 수입 역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8월 전년동월대비 0.1%를 기록하며 2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일본 및 아세안 시장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
- 국제유가 하락세가 멈추면서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인 수출물가 감소율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
 - 국제유가가 연초 이후 상승하며 40달러 선에 안착
 - ※ 두바이유 가격(달러/배럴)¹¹⁾ : 1분기 30.3 → 2분기 43.2 → 7월 42.5 → 8월 43.6 → 9월 1~22일 평균 43.3
 - 국제 유가 상승세로 최근 수출물가 하락세가 멈추고 감소율이 개선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으며 향후 유가 상승이 수출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수출물가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

<수출입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물가 증감률 및 국제유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주 :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11) 자료 : 한국석유공사|petronet.

- 2017년 세계 경기 회복세로 세계 교역도 완만한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어 수출 대외 환경은 2016년 대비 개선될 전망
 - IMF의 2016년 7월 전망에 의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 3.1%에서 2017년 3.4%로 회복세
 - 세계 교역 증가율은 세계 경기 회복세로 2016년 2.7%에서 2017년 3.9%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2017년 국제 유가는 비OPEC의 원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공급 과잉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산유국의 시장점유율 경쟁 및 달러화 강세 등으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
- 2년 연속 감소했던 수출입이 2017년에는 모두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되면서 무역 1조 달러 재달성에 대한 기대 상승
 - 2017년 수출은 3.8%, 수입은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입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을 합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단, 중국 경기의 완만한 둔화세, 선진국 회복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회복의 하방리스크가 존재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은 무역 1조 달러 재달성을 제약할 우려

<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 추이 및 전망 >



자료 : IMF(2016년 7월).
 주 : 세계교역증가율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량 기준.

<한국 교역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6년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⑦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

○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대내외 불확실성이 2017년에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내수심리의 회복 여부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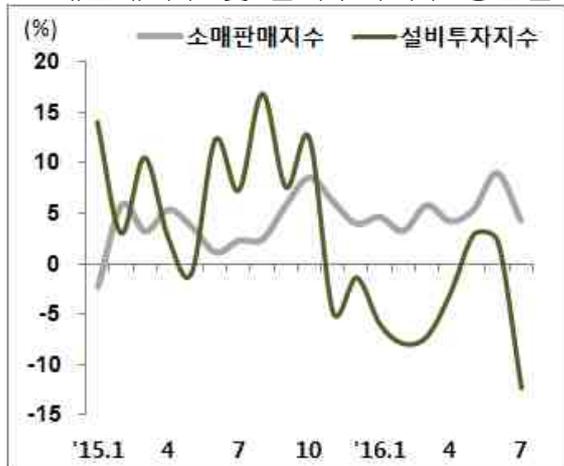
- 국내 소비 및 투자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경기회복세 부진 및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하락 등으로 부진이 지속

- 최근 국내 소매판매지수 증감률은 2015년보다 상승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3~5%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2015년 11월 이후 2016년 4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2016년 5월 3.0%, 6월 2.2%로 플러스 전환하였으나 7월 들어 -12.3%로 크게 하락

- 그러나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모습

-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 논란 등 일부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완화, 국제 유가의 완만한 상승세, 브렉시트 결정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일부 해소
-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국내 주가 변동성 지수 및 VIX 지수가 브렉시트 투표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어가는 모습

<소매판매지수 및 설비투자지수 증감률> <VIX 지수 및 국내 주가변동성 지수>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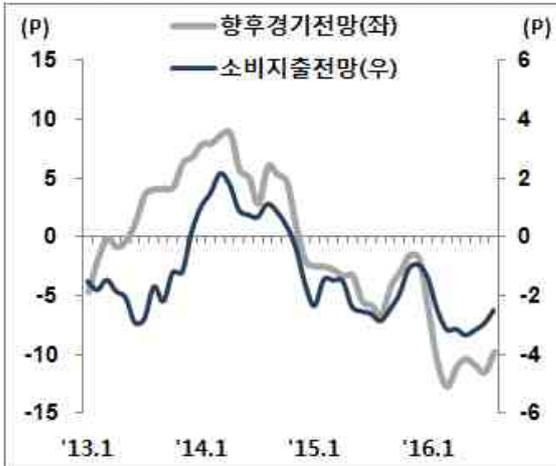
자료 : FRB of St. Louis, FN가이드.

- 소비자들의 향후 경제 인식 및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심리지수는 최근 저점을 지나 소폭 개선되는 징후가 나타남
 - 향후경기전망CSI는 2016년 상반기 중 장기평균 대비 약 10~12p 하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8월 장기평균 대비 -9.8p로 소폭 개선¹²⁾
 - 소비지출전망CSI 역시 2016년 상반기 중 장기평균 대비 약 3p 하회하며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였으나 8월 -2.5p로 소폭 개선

- 기업들의 업황 전망 BSI 역시 최근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 향후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
 -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2016년 3월 장기평균 대비 -19p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후 9월 -7p로 회복
 - 비제조업 업황전망BSI 역시 2016년 3월 장기평균 대비 -12p를 기록하였으나 9월 -3p로 회복되는 추세

- 가계 및 기업의 향후 경제 전망 인식 개선으로 2017년에는 내수심리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러한 내수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향후경기전망 및 소비지출 전망 CSI>



자료 : 한국은행.
 주 1) 계절 및 불규칙 요인 제거를 위해 X-12 ARIMA로 계절조정 후 3개월 이동평균.
 2) 각 지수의 장기평균(2007년 7월~2015년 12월)과 실제치 간 차이.

<제조업 및 비제조업 업황전망 BSI>



자료 : 한국은행.
 주 : 계절조정된 업황전망이며, 각 지수의 장기평균(2003년 1월~2015년 12월)과 실제치 간 차이.

12) 미래의 소비지출 예측 시 전망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는가보다 장기평균보다 높은지 여부와 최근 추세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7월, '최근 소비심리 움직임의 특징과 시사점').

3. 시사점

첫째, 성장의 과실이 분배로 돌아간다는 원칙 속에서 성장잠재력의 지나친 하락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 일방적인 수혜적 복지의 비중을 축소하고 경제활동을 동반하는 공공 일자리 연계형 복지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할 것임
- 또한 복지 지출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향후 정치 시즌을 맞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심성 포퓰리즘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에서의 정치권 공약에 대한 교차 검증을 통해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둘째, 단기적인 3% 성장률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노동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 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함
-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
-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투자 확대 및 건강 증진에 노력
-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¹³⁾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

13) 생산요소 한 단위당 산출의 성장(생산성)을 높이는 전략.

셋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한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소득 계층별 부채나 자산 규모 분포 등을 고려한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

- 높아진 가계부채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국내 경제 여건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가계가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유도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
- 저소득층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원금상환 유도, 서민금융제도 강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금융 컨설팅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

넷째, 기업구조조정, 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경색을 완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 조선·해운업 및 수출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단기적인 노동시장 경색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출 및 제조업기업의 사업 재편 및 신규 투자 유도를 통해 고용 부진을 완화해야 함
- 또한 청년층을 위한 취업자와 일자리간 미스매치 완화,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가고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다섯째, 소비 불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가계의 소득, 자산, 구조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요구 된다.

- 일자리 창출→소득증대→가계소비→기업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하고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방안 마련

- 경기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급랭을 방지하고 각 경제 주체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키도록 노력
-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 소득 향상, 일자리 안전성 제고, 소득분배 개선, 전세값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함

여섯째, 2017년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에 진입하고 세계 교역 증가율이 회복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 확대의 전기 마련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 2017년은 세계 교역 증가율 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출 대외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강하지 않고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수요 위축 우려가 존재해 견조한 수출 성장은 쉽지 않은 상황
- 신규시장 개척, FTA 활용 제고 노력과 더불어 기술 혁신 및 신제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 나아가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국 경제 패러다임 대응, 한중 FTA 활용 극대화 등 우리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일곱째,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부양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실제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심리의 개선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동시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와 같이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규제 완화 노력도 요구
- 또한 과거 세월호 및 메르스 사태와 같이 민간의 내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돌발 요인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내수 심리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HRI**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작성 담당

【① 성장이나, 분배냐】	주 원 이사대우 (juwon@hri.co.kr, 02-2072-6235)
【② 3% 성장 가능한가】	홍준표 연구위원 (jphong@hri.co.kr, 02-2072-6214)
【③ 한국 경제의 뒷, 가계부채】	정 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④ 구조조정 속 고용 위축 가속화】	오준범 연구원 (jboh9@hri.co.kr, 02-2072-6247)
【⑤ 소비 불황의 돌파구 마련될까】	김천구 연구위원 (ck1009@hri.co.kr, 02-2072-6211)
【⑥ 무역 1조 달러 재도전】	백다미 선임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⑦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	조규림 선임연구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